

하이테크 분야에 대한 경쟁법 적용가능성 논의

지난 6월 15일 미 FTC Robert Pitofsky 위원장은 American Antitrust Institute 주최 “21세기 독금정책의 과제” 회의에서 19~20세기에 입법된 독금법이 21세기 신경제(new economy)에 적용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주장들을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동 연설에서 Pitofsky 위원장은 독금법의 가장 핵심적 원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타당하며, 이런 원칙들이 현재의 하이테크 경제를 규율함에 있어서도 포기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의 독금법이 하이테크 분야에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3가지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1. 하이테크 산업에 있어 독점의 지속성 문제

하이테크 분야는 새로운 아이디어만 있으면 신규진입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측면이 있으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특허시스템이나 하이테크 분야의 특징적 현상인 네트워크 효과 등을 통해 진입장벽이 수십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하이테크 분야에서도 전통산업과 마찬가지로 ‘브랜드 인식력 (brand name recognition)’ 이나 불공정거래행위(가격차별, 배타적 거래 등)를 통해 독점기업이 신규진입자를 저지할 가능성 농후하다.

2. 기술혁신의 유인제공의 필요성 문제

기술혁신 문제에 있어서는 경쟁정책을 통해 경쟁을 보호하고, 지적재산권 보장을 통해 기술혁신에 대해 보상을 해 줌으로써 신상품 개발의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물론, 독점력을 인정해 줌으로써 기술혁신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효율성이 증대되는 경우, 동 효율성 증대효과가 반경쟁에 따른 폐해보다 크다면 경쟁법은 기술혁신을 보호하는 쪽으로 운영될 것이다.

경쟁정책과 지적재산권간의 균형과 관련하여, 경쟁당국의 입장에서는 경쟁정책과 지적재산권의 전통적 균형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지나친 지적재산권의 확대해석은 위험하고 특허권자가 자신의 독점력을 이용하여 특허사용자에게 경쟁에 영향을 끼치는 조건

(예컨대 배타적 거래, 재판매가격유지 등)을 강요할 경우에는 경쟁정책의 집행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3. 하이테크 산업의 독특한 운영방식 문제

전통산업에 있어서는 시장지배력이 높아지면 가격이 상승하지만, 하이테크 분야에서는 시장지배력이 높아질수록 가격이 인하하는 것과 같이 하이테크 산업의 동태적 기술혁신경쟁(dynamic innovation competition) 과정에서는 전통산업과는 달리 독점이 소비자에게 유익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경쟁당국은 시장지배력과 가격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전통적 인식이 하이테크 분야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경제분석기법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하이테크 분야의 독점기업이 가격 및 기술혁신에 있어 공격적 경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업이 하나가 아닌 둘 이상인 경우 소비자에게 더욱더 유익할 것이므로, 이는 AT&T의 분할로 인해 통신산업에 있어 기술혁신이 촉진된 것으로도 입증되었다고 밝혔다.

동 연설은 경쟁당국의 입장에서 19세기에 제정된 셔먼법의 기본원리가 21세기 New Economy 시대에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BM특허 동향과 경쟁정책의 대응방향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방법 관련 발명 특허(일명, BM특허)'가 전자상거래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 및 상품·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다.

1. BM특허의 경쟁정책상 문제점

BM특허란 비즈니스 방법에 관한 아이디어가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컴퓨터·정보통신기술과 결합될 경우 사업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특허를 부여, 보호함을 의미한다.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기업들이 시장 선점의 핵심요소인 아이디어와 정보통신기술을 배타적으로 보유키 위해 앞다투어 BM특허를 출원함으로써, BM특허권자에 대한 후발기업의 특허권 분쟁소송이 국내외에서 빈발하고 있다.

BM특허는 사업방식에 대한 아이디어 자체에 특허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기술개발을 막고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큰데, BM특허권의 부당한 행사에 의한 경쟁제한행위는 크게 BM특허권자가 라이선스 부여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와 라이선스를 부여하되 각종 불공정한 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두가지로 예상된다.

2. BM특허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

첫째, BM특허권자가 신규진입자의 시장참가를 방해하기 위해 부당하게 특허발명의 실시허락(라이선스)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의 관련조항(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부당거래거절 등)에 따라 시정조치한다.

* 공정위가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거절행위를 불공정행위로 판정할 경우, 라이선스를 거절당한 자는 특허법(제107조 통상실시권 재정신청)의 규정을 활용하여 특허권자의 승인없이 자신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해 줄 것을 특허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둘째, BM특허권자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끼워팔기, 구속조건부거래, 재판매가격유지 등 경쟁제한적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형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해당조항을 적용, 시정조치할 것이며, 셋째, 특허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해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 근거와 적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기준」을 제정하며,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심사기준에 지적재산권의 실시 허락 거절 경우를 포함하여 규율할 계획이다.

업계의 자율적인 실천노력 지원을 위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는 정부의 규제 등에 의해서 준수되어지는 것보다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풍토 조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본 책자는 유통구조 및 거래행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96년 9월에 기 발간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을 더욱 보완·수정하여 업계에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을 작성하기 쉽도록 재발간한 것입니다.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규제와 기업결합규제제도의 개편, 그리고 경제력집중억제정책 관련 규정의 개정은 그 내용면에서 중요하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많은 손질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은 본 책자에서 소개한 내용을 토대로 업종, 기업의 조직과 경영의 특징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작성·운용할 수 있으며 본 책자가 그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 판매가격: 18,000원

■ 구입문의: 조사부 / Tel. 775-8870~2

차 례

제1부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프로그램

제1절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의의와 필요성

1. 준수프로그램의 의의
2. 준수프로그램의 필요성

제2절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의 작성

1. 준수편람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2. 준수편람의 작성

제3절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1. 사내교육
2. 준수프로그램의 실효성 확보 조치
3. 사내자문기구의 운영
4. 기록보존프로그램의 운영
5. 준수프로그램의 계속적 관리

제2부 공정거래법 개요

제1절 총설

1. 경제질서와 공정거래법
2. 공정거래법의 제정과 개정
3. 공정거래법의 목적
4. 공정거래법의 특징

제2절 공정거래법상의 내용

1. 개설
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3. 기업결합의 제한
4. 경제력 집중의 억제
5.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6.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7. 사업자 단체
8.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9. 국제계약의 체결 제한
10. 공정거래위원회
11. 조사 등의 절차
12. 손해배상
13. 적용제외
14.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제3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1.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2.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기능
3. 심사관의 사건조사
4. 심사관의 사건심사
5. 위원회의 심의·의결

6. 각 회의의 사후조치
7. 불복절차

제3부 표준공정거래법 준수편람

제1절 공정거래법 준수편람의 작성방법

제2절 표준공정거래법 준수편람의 작성과 이용방법

제3절 공정거래법에 관한 회사의 기본방침(예시)

제4절 공통부문에 대한 표준공정거래법 준수편람

1.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2. 기업결합의 제한
3. 경제력 집중의 억제
4.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5.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6. 사업자 단체
7. 국제계약의 체결
8.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9. 대리점 영업시 검토사항
10.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11. 약관법

<부록> 국내외의 독점금지법 준수편람 사례

- (1) 삼성전자(주)의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
- (2) 히다찌 가전의 독점금지법 준수 메뉴얼
- (3) Allied Signal사(미국)의 Compliance Series